

제공일자	2015. 8. 5(수)	담당자	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
홍보담당	변철성 수석(02-3775-9115)	연락처	02-3775-9013, 010-2394-6630 총 2매

제목 : 퇴직급부 연금수령 31%에 불과, 근로자 노후보장 위해 연금화 절실

- 네덜란드 등 유럽복지국가: 은퇴자 50% 이상이 연금으로 퇴직급부 수령
- 미국 등 앵글로색슨 국가: 연금세제혜택 등을 통해 연금으로 전환 유도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의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, 김동겸 선임연구원은 『OECD 국가의 퇴직급부 연금화 동향과 시사점』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(계간 보험동향 2015년 여름호 테마진단).
-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여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연금의 중요성이 강조됨.
 - 그럼에도, 우리나라는 55세 이상 퇴직자(퇴직연금 수급대상자)의 96.9%가 일시금으로 퇴직급부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, 연금으로의 전환(연금수령)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- 반면, 네덜란드, 스위스 등 유럽 주요국가의 경우 제도적으로 연금수령을 의무화하여 연금중심의 퇴직급부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함.
 -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각각 은퇴자의 100%, 80%가 종신연금으로 퇴직급부를 수령하고 있으며, 덴마크의 경우 적립금액의 52% 가량이 종신연금으로 수령되고 있음.
 - 이들 국가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일시금 수령을 제한하고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함.
- 이와는 달리 미국, 호주 등 앵글로색슨 국가는 개인의 선택권을 중시하여 연금지급을 의무화하기보다 세제혜택 등을 통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연금수령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함.

-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임의가입형태인 미국 등 앵글로색슨 국가는 근로자의 선택폭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.

- 일시금수령의 경우에 비해 연금수령 시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, 지급방식 다양화를 통해 연금 선택을 유도함.

□ 이러한 OECD 국가의 연금화정책 동향을 고려할 때, 일부 일시금 수령을 허용하되, 일정부분은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향(부분연금화)으로 퇴직급부 지급방식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음.

- 장기적으로 미국 등 앵글로색슨 국가와 같이 자율적 선택에 의한 퇴직급부 수령이 이루어지도록 하되, 단기적으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연금수령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보완이 요구됨.

-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자체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퇴직급부의 일부 연금화가 필요하기 때문임.

- 또한, 투자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산층 이하 근로자가 투자실패로 연금재원을 소실할 경우, 개인의 장수리스크뿐만 아니라 국가의 고령화리스크(재정부담 가중)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.

□ 이를 위해 일시금수령에 비해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을 보다 더 부여하고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.

- 또한, 자영업자 등에 대해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하여 퇴직연금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, 연금전환을 통해 이들의 노후보장 기능이 보다 제고되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함.

<별첨> 테마진단“OECD 국가의 퇴직급부 연금화 동향과 시사점”1부. 끝.